

정수복의 '응답하는 사회학'



박근혜 대통령 이후를 생각한다

지난 토요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 100만 시민이 모였다. 그에 대한 응답은 아직 미진하다. 대통령의 자진 하야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국회가 지명하는 국무총리에게 경제와 사회 등 내치를 맡기고 외교와 안보 등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이원집정제를 원하는 것 같다. 야당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이양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주요 언론은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선 실세의 비리와 부패를 계속 파헤치면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호흡을 가다듬고 조금 길게 내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 관심의 초점은 대통령의 하야 여부라고 이후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다. 그것은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 권력 이양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내외적으로 산적해 있는 얽히고설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찌피 선거를 통해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과도적인 형태의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정부는 그 이전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자기만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것은

첫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터져 나온 갖가지 권력형 비리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문제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동안 문제가 생기면 관련 부처의 장을 해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정경유착, 부당한 인사 청탁, 측근적인 정책변경, 국가 기밀 누설 등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과도정부의 두 번째 임무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번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청와대는 재벌 기업에게 압력을 가하여 회장을 물러나게 하거나 특정 기업 형성에 거금을 희사하게 만들 수 있음이 드러났다. 재벌 그룹은 청와대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다. 노사관계와 관련된 법률 제정, 금융과 세무 관련 정책, 공적자금의 운용 등은 기업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결정에 따라 특정 기업의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사회 경제정책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된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이다. 지난 20년 동안 정규직은 줄어지고 비정규직은 늘어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가 커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경직도 더욱 커졌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중산층이 감소하고 양극화로 치닫는 경제적 불평등은 가계 부채의 증가와 기업 저축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과도정부와 차기 정부는 다양한 경제 정책과 복지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성장과 소득 불평등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민주화함으로써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기업의 공적 서비스 부분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 개선이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하에서 남북한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악화된 측면이 있다. 이

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이 갖는 효과가 제한적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 정부는 변화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되 중국·일본·러시아와 공조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개성공단 폐쇄 이후 단절된 남북 간의 직접 소통 라인을 다시 연결하고 남북 지도자급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주요 과제 중에서 첫 번째 과제는 과도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둘째와 셋째 과제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해야 할 사항이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야당과 여당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다. 과도정부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위에 제시한 3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는 광화문 광장에 모인 백만 시민의 대통령 퇴진 요구 밑에 깔려 있는 실질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학자·작가〉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커피한잔



조경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보름쯤 전, 이번 사태가 전국민을 경악 시킬 무렵이다. 다혈질이지만 인정 많은 내 친구 한명은 “저러다가 박근혜가 관에서 어느날 아침 번사체로 발견되는 건 아니냐”고 말했다. 스물두살부터 파스트 레이디 노릇을 했고 아버지를 뒤이어 권위주의적 통치를 해오던 그녀가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현 상황을 감내할 수 있겠냐는 거다. 자이가 붕괴되고 결국 자결을 택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다. 언젠가의 말씀이었다. 며칠 전 잡지 인터뷰에서 JP도 말하듯 그녀는 유아독존, 이 정도의 시련에 굴복할 여성이 아닌가 보나. 자결추측은 너무 순진했다.

버티기로 들어갔 듯 하다. 야당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몇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어떤가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명분은 거룩하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헌정질서를

어째 일이 묘하게 돌아간다

어지럽힐 수 없다”는 거다. 벽촌의 서생인 나는 사는 곳이 전라도라 하여 보수정당의 집권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와 지금정부의 실정을 돌아보면 정권은 이번에 바뀌지는 게 상식이자 역사의 순리라 생각한다.

천칭(天稱)은 양 점시에 같은 무게의 분동(分銅)을 올려도 좌우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수평이 된다. 그 좌우의 오르내림이 현대민주정치에서의 권력교번(勳力交番)이다. 케네디-닉슨-카터-레이건-클린턴-부시-오바마-트럼프로 이어지는 미국 민주-공화당의 교대집권이 좋은 예다. 영국도 처칠이래 보수당 집권기간이 더 길다는 특징이 있으나 대처-블레어-캐머런처럼 보수당과 노동당이 교대집권했다. 독일처럼 야에 기민당-사민당 이 연정을 통해 집권기간 동안 마저 일방독식을 양는 경우도 있다. 형평(衡平)이란 단어에 저울대 형자가 들어간 건 이런 이치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터지지 않았더라도 내년 대선은 진보정권이 집권할 가능성이 컸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인다. 버티기란 무엇인가. 부패로 망하게 된 보수가 진보의 분열을 틈타 되살아나겠다는 거다. 진보의 분열을 환영을 느낀 보수들이 재단결 할 때를 기다리겠다는 거다.

그녀가 하야성명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거국내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선택지는 탄핵 뿐이다. (유혈혁명을 기정하지 말기로 하자) 탄핵은 국회 의결부터 헌재 심판까지 최장 내년 7월까지 걸린다.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이내 대선이다. 그 사이 국회 국정조사는 최장 90일간, 특검 수사는 최장 120일간이 걸린다. 탄핵소추와 국정조사와 특검수사가 한데 엉켜 돌아가는 동안 민생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만둘 하고 특검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자는 점잖은 주장들이 반드시 나온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도 나라가 뒤집힐 정도의 열기였으나 두달을 못갔다. 지금이야 광화문 하야촉구 시위가 뜨겁지만 그 열기가 얼마 동안이나 이어질지 알 수 없다. 곧 엄동(嚴冬)이다.

그사이 야권이 일치단결할 가능성은 희미해 보인다. 거칠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사당화 된 민주당은 문재인 씨를 대선 후보로 결정하는데 이윤이 없을 것이고 국민의당은 중도노선을 내걸고 새누리당 비박계와 힘을 합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비박계는 국정혼란을 염려하는 보수의 재집권 상황을 보아가며 다시 범여권 대동단결로 나갈 공산이 더 크다. 루비콘강을 건너버린 일부만이 국민의당과 합친다 해도 그 표는 보수쪽을 잠식하기 보단

진보쪽을 잠식한다. 민주당-국민의당의 합당 내지 대선후보 단일화는 집권여부가 불투명하거나 반반인 상황이어야 진행될 이벤트인데, 지금처럼 집권이 눈앞의 딱처럼 보일 때는 성사되지 않는다. 1987년, 지구지긋한 전두환 독재가 6월항쟁으로 종식된 판에서도 군부독재 후계자인 노태우 후보가 YS, DJ로 갈린 야권을 가볍게 이겨버린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게 판이 돌아가는 것이다.

더욱이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은이 6차 핵실험이라도 강행한달지,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으름장이라도 놓는달지, 아베가 위로금 줬으니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한달지 하는 외적 변수가 생기고 남한사회에 단결된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강남 여연내한테 휘둘렀다는 그녀의 과오는 사소한 것으로 간주 될 수도 있다. 천안함 급의 국지전이 터진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대통령의 버티기와 야권의 분열, 이를 방지하려면 문재인씨는 물론이려니와 이른바 잠룡급 정치인들 그 누구도 집권권에 눈멀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판단과 행동기준을 나라 바로잡는 일에 두는 것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정치의 천정은 다시금 한동안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기고



장문수 광주시교육청 공보담당사무관

광주교육 희망의 합창되길

‘귀 기울여봐’ ‘귀 기울여봐’의 가사처럼 모두가 자기를 낮추고 함께 화음을 맞춰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광주교육도 모든 분야에서 서로 낮추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합창 같은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날 31일부터 5일간 ‘제2회 광주혁신교육페스티벌’을 광주교육연수원과 교육과학연구원 등에서 개최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학부모 동아리 축제, 마을교육공동체 비전선포식, 광주시민교육위원회 대토론회, 청소년독립페스티벌 등을 비롯한 각종 전시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광주교육은 합창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올 한해, 아니 지난 6년 동안 혁신교육의 성과를 살펴보고 우수사례를 모두가 함께 공유해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첫째 날 학부모동아리 축제는 ‘난타’ 등 흥이 돌아나는 무대로 꾸며져 모든

이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해주는 무대였다. 그동안 학부모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갖고 있는 기쁨을 마음껏 펼치는 축제였다. 광주 학생들이 일상 공부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둘째 날에는 광주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전선포식과 함께 지자체와 협약식이 열렸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셋째 날 광주시민교육위원회 대토론회는 저녁 시간에 개최됐다. 광주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해 ‘광주교육의 길을 묻고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논의했다. 시민들은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교육감과 대화를 통해 광주교육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 행사 마지막 날 오후에는 금남로 차 있는 거리에서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의 아

름다운 자립’이라는 주제로 ‘광주청소년 독립페스티벌’이 펼쳐졌다. 행사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마음에 새겨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실천하기를 기대해 본다.

모든 행사가 제 나름의 의미로 빛났다. 하루아침에 바뀌진 어렵지만 작은 희망 속에서 찾아낸 변화를 모두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상생과 협력교육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가족들과 함께 노력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질문이 있는 교실’과 학생중심의 교육을 통해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서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핵심역량을 키워왔다. 그 결과 우리 교육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혁신교육의 비전을 재확인했으며, 광주교육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 내년 제3회 혁신교육페스티벌은 더욱 웅장한 합창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청와대 ‘대통령 퇴진’ 외면 버티기 걱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태로 거세지는 퇴진 요구에 귀를 막은 채 버티기에 들어갔다. 탄핵까지 감수하며 장기전을 치르겠다는 의지로 일한다.

야(野) 3당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삼고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의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당 차원의 하야 요구에 가속도가 붙었다.

국민의당도 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은 절대로 임기를 채워선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은 박 대통령 개인의 나라가 아니다. 나라는 어떻게 돼도 좋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며 조기대선을 촉구했다.

야권이 이처럼 강경한 하야 요구로 입장을 정리한 것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통과까지 시간이 적잖

이 걸리고 국회 가결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조건 없이 퇴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버티기로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탄핵 정국으로 들어섰을 경우 결정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 탄핵을 막는 장치가 있을 뿐 아니라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 최대 8개월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전개되면 국정 혼란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민생은 피폐화할 것이 확실시된다. 외교와 안보 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제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 100만 촛불을 보고도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비엔날레·문화전당 의혹도 철저히 밝혀야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종 전 문화체육부차관이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모든(의혹) 사항은 검찰 수사에서 철저히 제대로 응답하도록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김 전 차관은 이번 비선 실세 국정농단의 행동대장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비리 북대전인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은 물론 최순실의 딸 정유라 특혜 문제까지 개입하지 않은 사안이 없을 정도다. 문제부 차관으로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아도 부족했을 판에 어떻게 최 씨의 딸 대학 입학에까지 신경 쓸 수 있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는 2013년 문제부 2차관에 발탁된 이후 ‘체육계 대통령’으로 군림해 왔다. 차관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동원해 최 씨가 실질적으로 인사권과 운영권을 틀어쥔 K스포츠재단 및 최 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하면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올해 초 최 씨가 K스포츠재단 사업을 합법적으로 수주해 이권을 챙기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블루케이가 수천억 원대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공사 수주를 목표로 스위스 누슬리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현장에도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김 전 차관은 2년 전 윤정환 광주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흥성 담 작가가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한 ‘세월오월’(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의 철거를 종용했다고 한다. 지역 문화계에선 차은택의 문화장조융합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축소에도 그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이러한 모든 의혹들을 날날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 주말 서울시청과 광화문에 있었다. 이날 현장엔 유독 가축단위 참가자들이 많았다. 부모곁에 앉아 물고러미 촛불을 바라보던 아이의 얼굴이 저금도 기억에 남는다.

인파에 치여 간신히 광화문 현장에도 찾았다. 조PD가 히트곡 ‘친구여’를 개사해 ‘순실의 시대, 상실의 시대’를 불렀다. 참가자들은 ‘하야’로 박자를 맞췄다. 이 승환은 ‘동생’ 표창원을 비롯한 야당국회의원들에게 “재지 말고 간보지 말고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달

는 보도가 있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정답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씨의 3학년 출결 일수는 단 17일에 불과했다. 수업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수행평가 만점, 교과 우수상까지 받았다.

그 어느 때보다 심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2016년 11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조가 ‘상식’이 되는 그런 사회를 꿈꾸며 아이들은 촛불을 들었다.

오늘은 수능일이다. 전국의 60만 수험생,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수능과 촛불

이날 광화문에서 는

학년 출결 일수는 단 17일에 불과했다. 수업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수행평가 만점, 교과 우수상까지 받았다. 그 어느 때보다 심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2016년 11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조가 ‘상식’이 되는 그런 사회를 꿈꾸며 아이들은 촛불을 들었다.

오늘은 수능일이다. 전국의 60만 수험생,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